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와 노동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교통과 통신 기술의 발전, 그리고 자본의 국가 간 이동을 가로막는 제도의 완화 혹은 철폐에 의하여 오늘날 글로벌 경제의 통합성은 유례없이 높아져 있다. 사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친 시기에도 전보의 발명과 대형 선박 및 철도의 발달 등에 힘입어 국제화가 놀랄 만큼 빠르게 진척되기도 하였으나, 그때에 비하여 21세기의 국제화는 그야말로 국경 없는 경쟁과 문화적 차이를 뛰어넘는 소비의 표준화 확장을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그것을 추진하는 주체는 제국주의 국가들이 아니라 다국적기업 혹은 초국적기업이라고 불리는 초대형 브랜드 기업들이다.

이들 다국적기업들은 임금수준이 높은 선진 지역에서는 연구개발과 마케팅 활동 등에 주력하고 부품조달과 생산은 주로 인건비가 싼 개발도상국 지역에서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애플을 비롯한 많은 고가 브랜드 업체들의 기기는 폭스콘 등 중국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업체들에게 위탁되어 생산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이러한 국경을 넘어선 분업이 콜센터를 포함한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 등 서비스산업으로도 확산되어 왔다. 이렇듯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GPN: Global Production Network)가 국경을 넘어 구축되면서 글로벌 경제의 통합성을 증진시키게 되었는데, 이때 가치의 생산과 배분 과정에 대한 이들 다국적기업들의 지배력은 결정적이다. 그들은 제품의 기획, 연구개발, 디자인, 부품조달과 생산, 물류, 마케팅, 사후 서비스에 이르는 상품 생산 혹은 서비스 공급 과정에 대한 가치 분석과 배분을 통하여 글로벌 가

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을 조정,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경영단계 별로 가치의 흐름이 스마일 커브(초기의 연구개발 및 말기의 마케팅과 브랜드 관리에서 부가가치 수준이 높고, 중기의 생산 단계에서 부가가치가 낮은, 즉 사람이 웃을 때의 입 모양과 같은 형태)를 띠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는 것을 통하여 부가가치와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하는데, 이는 결국 숙련 및 기술 인력의 국가 간 편재 현상과도 상승 작용을 일으키게 된다.

요컨대 기술수준이 낮고 숙련인력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은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낮은 부가가치를 낳는 활동으로 역할이 국한되게 되고 이는 소득증가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심지어 노동권의 억압과 적정한 훈련 공급의 부족 속에서 저숙련과 저임금의 함정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또한 이번 호 특집이 주로 근거하고 있는 맨체스터 대학을 중심으로 한 “Capturing The Gains” 그룹의 연구와 조사에 따르면 재하청과 비정규직화 속에서 아동노동과 비인간적 처우라는 사각지대에 던져진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사실 이러한 국제분업구조는 우리의 경험에서 익숙한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 과정에서 선진국의 하청생산 기지화를 자처하기도 하였으며, 기술과 관리능력이 한껏 올라가도 한동안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의 함정에 빠져서 많은 부가가치가 선진업체로 흡수되어 가는 것을 발만 동동 구르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후 국내 선도업체들은 OEM 거래를 넘어서서 ODM(Original Design Manufacturing) 업체로, 나아가 OBM(Original Brandname Manufacturing) 업체로 도약하기도 하였다. 1990년대 이후 몇몇 국내 초우량기업들은 자신이 다국적기업이 되어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를 주도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이러한 한국의 경험을 일반화하면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속에서 어떻게 경제적 고도화(economic upgrading)에 주력할 것인가에 고민을 집중하면 될 듯하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한국은 지난 50여 년의 세계경제 역사에서 대단히 예외적인 국가이다. 많은 개도국들은 과거 종속이론가들이 주장한 대로 “저발전의 발전”에 고착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OEM, ODM, OBM 등 순차적으로 발전하는 업체들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 왜냐하면 더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려 하면 할수록, 요구되는 경영과 기술능력의 수준은 가속적으로 높아지고, 선진업체들의 견제는 더욱 심해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선진업체들의 특허

소송은 대표적인 견제 수단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설사 경제적 고도화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노동문제를 핵심으로 하는 사회적 고도화(social upgrading)로 자동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회적 고도화는 ILO의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 개념과 연동되는데, 사회적 주체로서 근로자들의 권리와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오랫동안 이 주제를 연구해온 Gereffi를 필두로 하는 “Capturing The Gains” 그룹은 경제적 고도화가 무리가 될 수밖에 없는 영역에서는 그 자체로 사회적 고도화에 주력하면서 다른 영역에서는 경제적 고도화와 사회적 고도화의 상승작용을 기대하는 등 다양한 경로와 전략을 제안한다.

이 같은 세계체제론적 접근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매우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저부가가치, 저임금 영역에서는 여전히 중국 등 개도국의 근로자들과 보이지 않는 임금 경쟁을 벌여야 하는 위치에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를 주도하거나, 적어도 준중심적 위상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나이가 아프리카와 남미 국가들에서 생산활동을 조직하고 있기도 하다. 이는 이제 우리의 시각을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차원으로도 확장해야 한다는 것을 함의한다. 국내적인 양극화는 국제적 차원의 숙련의 양극 분해와 관련되어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개발도상국 근로자들의 무권리 혹은 약탈적 노동력 이용관행이 국내 저숙련 근로자들의 임금상승을 더욱 억제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국내 기반의 다국적기업들이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인 차원에서도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감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 노동운동과의 연대 및 근로조건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 지원을 통하여 국경을 넘어선 근로조건 경쟁적 하향 과정, 즉 ‘바닥으로 향한 질주’(race to bottom)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할 책무를 정부나 노동조합 상급단체 등이 지고 있다는 것을 함의한다. 모쪼록 이번 호 특집에서 그러한 시사점을 얻어내길 희망한다. TV 프로그램의 오지 탐험이나 봉사활동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제는 중진국 수준을 훌쩍 넘어선 우리가 개도국에 대해서 일과 생활 측면에서 어떤 책임을 수행할 것인가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하는데, 그것은 거꾸로 국내의 양극화를 극복하고 일자리의 양과 질을 확충하는 데도 효험을 갖게 될 것이다. **KLI**